

수돗물값 이대로 좋은가

사공 황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제도팀장

얼마전 일부지역의 정수장 수돗물과 가정급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하여 한동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터져 나온 적이 있다. 바이러스 검출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원인은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경우에는 정수 과정에서 완전소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급수 수돗물에서 나온 경우에는 정수과정 또는 급수과정에서 침투되어 일어났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수장에 현대화된 정수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불량 수도관도 하루바삐 갈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수한 시설의 설비·전문인력의 확보와 수도관 교체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많은 소요재원을 수반하고 그 경비를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지방상수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비용은 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지방상수도의 경우에 기간시설사업비 등 특정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겠지만, 당사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상수도란 특정공공재화를 특정개개인(상수도 보급율 85.2%)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에게 따라 많이 쓰고 적게 쓰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조세가 주재원인 일반회계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상 적절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익을 받는 폭이 클수록 많이 부담하게 되며 상수도의 경우 수돗물을 많이 쓰는 자가 또 많이 부담한다.

수도요금은 생산비용을 가지고 매겨진다.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쓰여지는 경비는 원수구입비, 취정수비, 운영요원인건비 물건비 등 비용뿐 아니라, 수원지, 취정수시설, 배수지, 가압장, 관로 등 시설비와 시설관리유지비가 있다.

수원지 축조, 취정수시설, 송수관 등 상수도의 주요기간시설(infra structure)과 같이 선행투자적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시설의 설치비, 유지비, 시설감가상각비, 수돗물생산비 등 대부분 비용을 쓰는 사람에게 사용량에 따라 나누어 부담시킨다.

상수도는 일반적으로 취수하여 소독, 침전, 여과의 생산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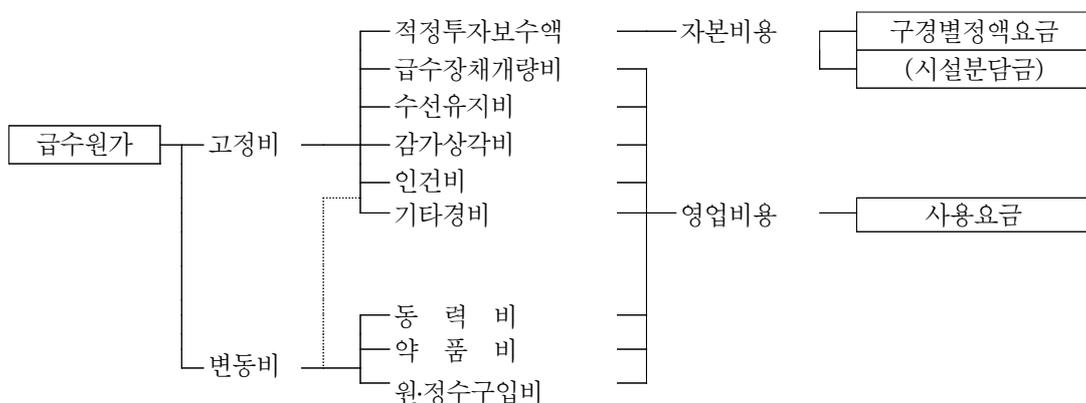
내어진다. 그러다가, 수질이 나쁘면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고 고지대의 경우 가압장을 거쳐 분배되며 이때 들어간 비용이 생산비용에 추가되어 사용자는 요금을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물소비량의 증가로 상수도 생산시설의 확충경비와 수질악화에 따른 수질개선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생산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물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선진국에 비하여 많지 않지만, 일부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상수도시설과 자산재평가결과 증가분을 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반면 공사중에 있는 비가동자산의 경우에 완공 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비가동자산가액의 50%를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적절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투자보수율 9%를 은행실세금리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급수원가 및 요금산정체계〉



이렇게 한 경우 요금인하분과 요금인상분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두 결과를 상쇄하여 나온 증감부문을 요금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똑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단위요금이가정용<욕탕1종<업무용<영업용<욕탕2종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요금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단계적으로 유사한 업종수를 통폐합하여 줄이고 요금격차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가 내는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된다.

상수도요금은 지방공공요금으로 물가관리품목으로 되어 있다.

1994년까지는 정부(재정경제부)의 통제

를 받아 왔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상수도요금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물가대책위원회의 물가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99년도의 경우 생산원가는 톤당 535원에 비하여 공급단가는 394원에 불과하여 현실화율이 73.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만이 물수요를 억제하고 상수도재정의 건실화를 통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초기 1998년도에 물관리조정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동안 생산원가의 80% ~ 100% 수준까지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2000년 현실화 수준은 상수도 예산집행

<OECD국가의 물자원 이용현황 비교>

구 분	벨기에	스페인	한국	이태리	독일	프랑스	일본
인당취수량(m ³ /인)	690	1,030	540	990	530	700	720
자원에 대한 취수비율(%)	42.5	36.8	35.6	32.2	34.4	23.9	20.8
물요금(US\$)	2.15	1.07	0.34	0.84	1.69	3.11	2.1
구 분	미국	덴마크	체코	터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인당취수량(m ³ /인)	1,870	180	2,470	560	180	830	600
자원에 대한 취수비율(%)	19.9	15.7	15.6	15.2	14.6	12.1	5.0
물요금(US\$)	1.25	3.18	0.68	1.51	3.11	1.14	0.82
구 분	네델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필란드	캐나다	스웨덴
인당취수량(m ³ /인)	290	840	140	280	480	1,600	310
자원에 대한 취수비율(%)	4.9	4.3	3.4	2.7	2.2	1.7	1.5
물요금(US\$)	1.29	1.64	1.01	1.05	2.76	0.7	2.6

자료 : OECD, OECD Environmental Data : Compendium, 1999
 OECD, The Price of Water : Trends in OECD Countries, 1999

분에 대한 결산이 끝나지 않아 현실화율은 78%수준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

요금의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공요금수준에 관하여는 정부부처마다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서는 요금현실화를, 물가당국 재정경제부는 공공요금인상억제라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인상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좋겠지만, 요금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가 적어 질이 나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질악화로 인한 불신이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처럼 투자재원이 부족한데로 방치할 경우 생산시설의 개·보수, 노후관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출수 등 수질문제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또 상수도재정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 실례로 상수도유수율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70%에 불과하다. 선진국 90%수준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새는 관을 제대로 교체해주면 수개의 댐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대부분 새로운 댐의 설치에는 관심이 있고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노후불량관의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금올리는 것도 시원치 않

고 일반재원의 투자도 미미하기 때문에 상수도 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자손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을 올려 현세대 사람이 제대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현재 20년이상 시급한 노후관으로서 5년 동안 교체에 쓰는 비용은 15,307km에 1조 1,067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수돗물을 아껴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값 현실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왔다. 산업화가 되기 전만해도 샘물, 웅달샘, 계곡수 등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물을 사먹으리라는 것은 생각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가 보급된 후에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으로 물값은 싸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리속을 지배하여 왔다.

오늘날도 “물같이 쓴다”는 말이 낭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전기료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비싸도 당연히 받아 들이고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물 만들기에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는 것에는 아직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연평균 1,274mm로서 많이 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여름철에 집중되어 대부분 흘려보낼 수 밖에 없지만, 산간·도서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은 아직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UN기구(PAI)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먼트로 크게 달라짐으로 엄청난 물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이기주의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댐의 설치가 크게 어려워지고 있다.

수돗물로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물을 아껴쓰고 아울러 누수를 줄이는 노력도 계속해야 하겠지만, 당장 늘어나는 물 사용량의 억제를 위해서는 요금현실화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

수도요금이 가계에 주름을 지을 정도로 비싸가

'99년도의 경우 상수도요금은 생산단가 535원/t인데 실제 공급단가는 394원/t을 받고 있다. 톤당 141원을 밀지고 있다. 물가 연보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95년 이후 매년

10%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수치하나만 볼 때, 2000년 소비자물가증감율이 평균 3.6%인데 비해 수도요금의 인상은 18.3%이므로 가히 놀랄만하다 하겠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관리대상 509개 품목을 놓고 볼 때, 전체 가중치 1000중에서 상·하수도요금을 합한 가중치가 5.2이며, 상수도요금 하나만 놓고 볼 때 가중치는 더욱 작은 4.1에 불과하다.

지금 가구당 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23t 수준인데 서울의 경우 금년도 요금 체계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상수도사용료가 3,680원, 구경별정액요금(ø13m/m)이 1,080원, 물이용부담금 2,530원으로서 모두 7,290원이다. 이 값은 호텔커피 1잔값에 불과하다.

3·4명의 가족이 한달내내 세수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물을 마시고, 대소변을 처리하고, 또 샤워를 하면서 쓰는 비용이 한달에 1만원도 아닌 7,290원이라면

<국민소득을 감안한 물소비수준 비교>

구분	한국	영국	호주	프랑스	미국	일본
1인1일급수량(ℓ)	409	393	479	212	678	397
국민소득(천\$)	9.5	17.7	20.7	25.6	27.6	34.7
국민소득 천\$기준 물사용량(ℓ)	43.1	22.2	23.1	8.3	24.6	11.4

자료 : IWSA, 1997. 건설기술연구원, 상수수요예측의 현실 및 과제, 1998
한국은 1999년말 현재자료임

<광역·수도 세분류별 연도별 증감율>

(단위:%)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99	기여도
광역·수도	7.8	6.4	4.1	3.2	3.8	8.9	11.3	25.0	-2.0	14.1	0.73
전기료	6.4	11.1	1.3	0.0	0.5	0.3	2.5	9.2	0.9	0.4	0.00
수도료	9.4	3.7	6.1	9.1	12.6	12.8	8.2	15.6	16.6	18.3	0.13
연료	8.3	4.6	5.1	3.5	3.2	13.6	17.1	-6.8	-6.8	19.3	0.59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똑같이 10원이 오르더라도 10원짜리가 10원으로 오르면 100%가 인상된 걸로 나오고 100원짜리가 10원 오르면 10%가 인상된 것으로 나온다. 통계의 마술이라 할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값싸게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고 쓰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으랴 상수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댐설치가 쉽지 않다.

우리가 쓰는 물이 기본적으로 적다면 할 수 없이 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물 소비량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 상수도 생산량중 빠져 나가는 30%를 못 빠져 나가게 하고 쓸 수 있다면 댐을 안 짓고도

늘어나는 수돗물량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

새는 물이 못 나가도록 하루바삐 노후불량관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일반재원도 넉넉치 못한 터라 일반재정에 기댈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요금현실화로 물이 귀한 것을 알게 하고 또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스스로 물 낭비량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2005년도 닥쳐 올 물부족시대를 대비하는 자세이고 물 부족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시사용어 해설

◆보상무역(補償貿易)

중국은 '4대 근대화'의 실현을 위해 해외선진기술의 도입과 대외무역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경제건설과 외화획득을 위해 새로운 협력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보상무역도 그중 하나로 외국측이 원자재나 기계·설비를 수출하면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을 수입품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 외국에 수출하여 기계·설비의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생산물 분여(PS; production sharing)방식이라고도 한다.